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	2026. 11. 11(수)	공동위원장	송옥주 · 서지현
담 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국	문 의	02-2630-7082,7086, womenminjoo@gmail.com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관계성 범죄 근절 위한 범정부 대응 현황 점검 및 입법 · 정책 추진 방안 논의
- 여성단체 간담회 통해 현장 의견 청취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송옥주 · 서지현)는 오늘(11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교제폭력 ·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와 관련 입법 ·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 관련 법 · 제도 개선 및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제2차 회의에는 송옥주 · 서지현 공동위원장과 이수진 간사를 비롯한 김남희·이연희·이주희·정은혜·박지영·이성영·김혜정 위원 등 10인이 참석했다.

또한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최형규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주승은 여성안전기획과장, 한동희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여성단체에서는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로리 주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수정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상임대표,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박선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전다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플랜과 관련한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현황과 주요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제폭력·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스마트워치·전자발찌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 대책, 사법 절차상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관계성 범죄 관련 통계 관리 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 입법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송옥주 공동위원장은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일상에서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와 당 차원의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계성 범죄와 관련하여 100건이 넘는 법안이 정리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대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대책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하는 한편 국회 법사위와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미 늦어진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여성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입법·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성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11.11.(수)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송옥주·서지현 공동위원장)

[별첨] 사진


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관련 여성단체 간담회 -
민주당


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민주당